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구축 나선다

전주시, '개편 1차 시범사업 공모 선정' 7월~2027년까지 사업 추진... 전국 확산 선도모델 구축 기대

전주시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새로운 자활정책 모델을 선도하게 됐다.

시는 오는 2028년 자활정책 개편을 앞두고 전국 확산 모델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주관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 공모에 전주지역자활센터가 선정돼 오는 7월부터 27년까지 1년 6개월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참여자의 근로 능력과 자활 의지, 자립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에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자활사업을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기존 자활근로사업을 취·창업 중심의 '자립도전형' 과 역량 회복 및 근로 기반 형성을 위한 '자활준비형' 으로 구분, 참여자 특성에 맞는 단계별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시범사업 기간 참여자 초기 상담과 자립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근로 능력과 자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취업도전형과 창업도전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준비형 등으로 세분화된 사업단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단 참여 이후에도 정기적인 사례 관리와 중간평가를 실시해 참여자의 자립 역량 변화에 따라 사업단 재배치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되는 현장 경험과 우수 사례를 바탕

으로 정부의 자활지원체계 개편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향후 전국 확산이 가능한 선도모델 구축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전주지역자활센터와 덕진지역자활센터 2개 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해 31개 사업단 732명 규모의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활근로사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 관리,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자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계기로 참여자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은숙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자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자활지원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주시는 지역자활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참여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1차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7년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2028년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본사업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발맞춰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변화하는 자활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 마련에 힘을 기울인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해 복지시설에 총 33만2051마일리지(약 330만 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공적 마일리지' 활용 나눔 실천

전주시 공무원 일동 자발적 공무 국외출장 항공 마일리지 기부

전주시는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해 복지시설에 총 33만2051마일리지(약 330만 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전달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전주시 공무원의 동참으로 마련된 생활필수품 등 후원 물품은 완산구 평화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원광모자원'에 전달돼 시설 내 아동·청소년과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개인별 적립·양도 불가·사적 사용 제한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퇴직이나

기한 만료로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소멸 예정 마일리지를 보유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개인별 항공사 마일리지 불에서 구입한 물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운동유 전주시 부시장은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될 수 있는 공적 마일리지를 모아 지역 사회의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숭선수범하여 따뜻한 나눔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혹서기 대비 주거 취약가구 찾아 안전 활동 펼쳐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주거서비스 플랫폼 참여단체와 실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지난 26일 관내 저소득 주거 취약가구를 찾아 주거서비스 플랫폼 참여단체와 함께 혹서기와 장마철에 대비해 가구 내외부 소독 방역 봉사활동과 해충방지약 설치, 에너지안전키트 지원 등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수요 맞춤형 주거서비스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참여단체들은 지역 내 주거 취약가구 내·외부 살균 소독과 해충방지약 설치, 개별전원멀티탭·화재예방 소화패치, 절수형 샤워기로 이루어진 에너지안전키트를 전달 및 설치했다. 또,

가정용 소화기를 전달하는 등 혹서기 대비 주거생활 안전을 살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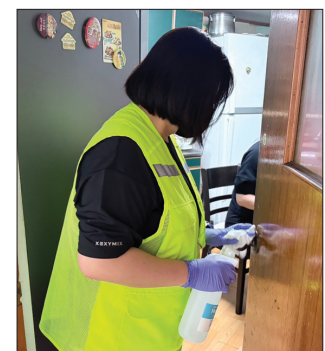
수요 맞춤형 주거서비스 플랫폼은 지역 내 공기업, 민간기업 및 단체, 행정, 학계 등 26개 단체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주택 저탄소 실현을 목적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주거서비스 플랫폼의 주요 사업으로는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복지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한 에너지 취약계층인 연탄난방 사용자 가구의 친환경 탄소섬유 바다난방 전 환과 에너지안전키트 지원 △플랫폼 참여단체의 후원과 재능 기부를 통해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가정형 태양광 설치 및 단열 집수리, 노후 전기설비 점검 및 교체, 소독 방역 등이 다.

지난 2023년부터 이어진 플랫폼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26가구의 연탄난방가구에 대한 친환경 탄소섬유 바다난방 전환을 이끌어냈으며, 19가구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지원됐다. 또, 30가구 이상에 크고 작은 단열 집수리를 지원하는 등 가구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도왔다.

그 결과 이 사업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주택 온실가스 저감을 실현한 우수 사례로 선정돼 지난해 '2025년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6일 관내 저소득 주거 취약가구를 찾아 주거서비스 플랫폼 참여단체와 함께 혹서기와 장마철에 대비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지문화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권희성 기자

오감으로 즐기는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

전주농기센터, '오감으로 소통하는 반려식물 이야기' 시범 운영

전주시가 도시농업 체험농장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식물을 오감으로 느끼고 반려식물 돌봄으로 이어가는 체험형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지난 27일 도시농업 체험농장 도란도란에서 도시농부 텃밭교육 과정과 연계해 '오감으로 소통하는 반려식물 이야기'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도시농부 텃밭교육은 도시농업 체험농장 도란도란을 이용하는 회원 중 농사를 처음 시작했거나 텃밭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말에 운영해 온 기초교육 과정이다. 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작물 재배 기초와 계절별 텃밭 관리 요령 등을 안내하며 시민들이 텃밭 활동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날 프로그램은 반려식물 관리교육과 화분 만들기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



존 체험에 생태텃밭 활동을 더해 기획됐다.

참여자들은 오감 이야기 생태텃밭을 둘러보며 식물의 색과 향, 자연의 소리, 텃밭에서 만나는 맛을 주제로 한 간단한 체험 활동에 참여한 뒤, 직접 반려식물 화분을 만들어 집으로 가져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오는 9월부터 프로그램 참여자를 별도로 모집해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모집 일정과 운영 내용은 향후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지역 농업 발전 이끌 도시농업 전문가 33명 배출

전주도심 속에서 농업 활동을 영위하며 지역 농업 발전을 이끌 도시농업 전문가 33명이 추가 탄생했다.

전주시는 지난 26일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전주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한 33명의 도시농업 전문가를 배출했다.

올해로 11기를 맞은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은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난 3월 6일부터 약 4개월간 총 80시간(이론

40시간, 실습 40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도시농업의 이해 △텃밭 설계 및 작물 재배 △치유텃밭 조성 실습 △현장 견학 등 이론과 실습을 아우르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시농업 체험농장에서 진행된 텃밭 조성 및 재배 실습의 경우 조별 활동을 통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돼 교육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복지재단, '부활 40주년 콘서트' 서모금 캠페인 전개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지난 27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6 부활 40주년 콘서트'에서 '한평프로젝트-삼 더하기 행복'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평프로젝트 '삼 더하기 행복'은 공연장 로비 한평 공간에서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전주복지재단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알리고, 정기 및 일시기부 참여를 통해 일상 속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모금 캠페인이다.

특히 '부활 40주년 콘서트'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진행돼 공연을 찾은 시민들이 음악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나눔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윤방섭 이사장은 "부활 40주년이라는 뜻깊은 공연과 함께 나눔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부활과 공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문화예술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찾아가는 모금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우려와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옮겨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